

## 12·12 주역 5명 국립묘지 안장됐다

5·18재단 '묘지법 개정 공청회' 실태보고서

"법령개정·특별법 제정 추가 안장 막아야"

군사 반란 판결을 받았던 12·12사태 관련자 중 5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주정립 5·18 기념재단 상임연구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친일·반민주 인사 국립묘지 안장 반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공개한 '12·12 군사반란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빚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비롯해 12·12 사태 관련자 5명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12·12 사태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전 의원도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전 숨져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들은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 16명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안현태씨는 5공화국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역임한 데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복역한 점이 문제가 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지만 지난달 기습적으로 안장됐다.

이와 관련, 주 연구원은 "안현태처럼 12·12 및 5·18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인사가 사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데서도 드러나듯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지나는 의미에 비춰 너무나 출색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란 또는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루된 사실이 판명된 인사는 국립묘지 안장

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며 "국기(國基)를 엄정히 세우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자손만대에 드높이기 위해서도 이를 12·12 및 5·18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기존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 학과 교수는 "국립묘지는 정치적 갈등 공간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공간"이라며 "정치적 공과가 논란이 되는 인물의 국립묘지 안장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호남지역 가계부채 40조 전국서 가장 많이 늘었다

4년만에 37%나 증가

어음부도율은 전국3배

호남지역의 경제주체인 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 평균소득이 전국 최하위<광주일보 29일자 1면>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수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과 기업 어음 부도율도 호남권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권의 가계부채는 2007년 29조3000억 원에서 지난 7월 40조1000억 원으로 36.8%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31.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권역별 평균 증가율은 ▲수도권 33.2% ▲충청권 32.2% ▲영남권 25.0%였다.

특히 호남권은 은행권 가계부채가 11.1% 증가했지만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와 신협연동조합 등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70%나 증가해 이자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남권 주택대출은 2007년 12조3000억원에서 지난 7월 20조2000억원으로 65%나 상승해 다른 권역과 비교해 2~3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호남권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또한 35.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호남권의 1인당 가계부채는 765만원으로 강원과 제주(747만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호남권의 어음 부도율도 연평균 0.1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전국 연평균 0.07%의 두 배에 달했다. 권역별 연평균 어음 부도율은 ▲영남권 0.14% ▲충청권 0.1% ▲수도권 0.07%였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근 4년 동안 호남권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의 3배를 웃돌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선고

광주지법 1심공판

현직 고위법관의 신분으로 기소돼 이목을 끌었던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절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있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의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산부 재판장으로 강 변호사를 주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치이나 권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들을 불러 강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도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29일 의장단 회의 및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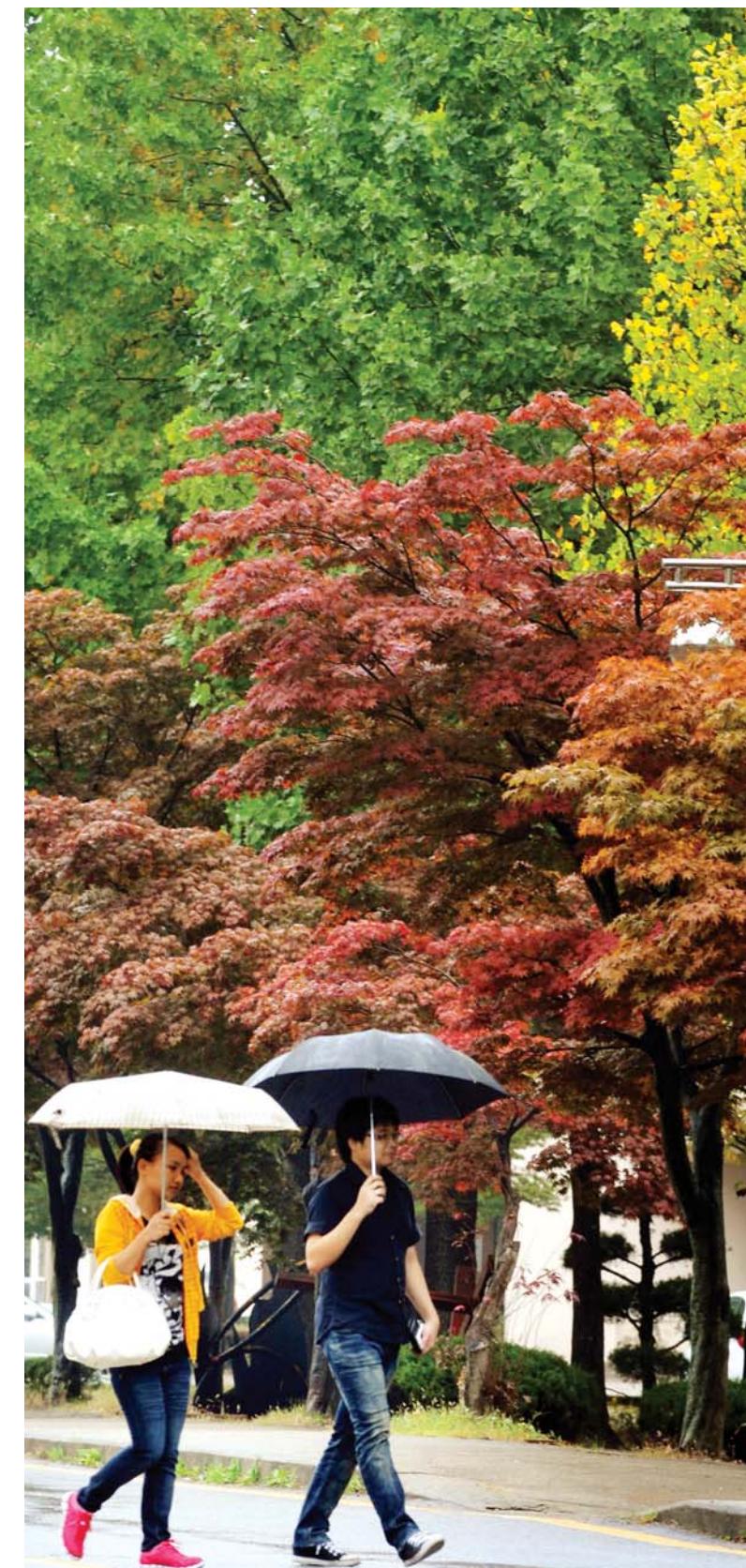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합쳐 4748만원인 도의회 의정비는 지난 2008년부터 인상되지 않았으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울 평균 5303만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데이다. 지방재 발행 등으로 지방재정까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전체 의원들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간 전남의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제시한 내년 전남도의회 의정비 기준액은 4546만원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캡스의 가을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9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가는 교정을 거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독교영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
입학 학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b>광신대학교</b>	

우암학원 장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b>남부대학교</b>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b>전남과학대학</b>	(061) 360-5050

## 나주 영산강길·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함께 걷자, 가을 속으로

- 참가비 무료!  
- 선착순 1,000명!

영산강길 걷기대회

일시 : 2011년 10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선착장

담양수목길 걷기대회

일시 : 2011년 10월 22일(토) 오후 1시  
장소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나주시 담양군

주관 | 광주일보사

문의 | 062-220-0541

